

“우린 이웃사촌”...고려인 외면 정책에 지역사회 뭉쳤다

광산의회, ‘소비쿠폰 제외’ 공론화
내일 본회의서 성명·건의안 추진
주민 “전 국민 공평한 정책 적용”
청원서에 대통령실 “논의 후 회신”

“우리는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전 국민’ 정책이니 함께 받아야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려
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16일 제298회 임시
회 1차 본회의에서 민생소비쿠폰 정책에서
배제된 고려인들을 위해 성명서 혹은
건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의회 의원 조지은은 본보 10일
자 1면 “우린 한국인 아닌가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과 12일자 6면 “고
려인도 한민족...소비쿠폰 없어도 되지만
서글퍼”에 각각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
사로 떠오른 고려인 소비쿠폰 제외 문제
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은 “우리란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 써서 해내야 할 일이고 그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고려인들의 소비
쿠폰 제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
혔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상 내
국인을 기준으로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
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
로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
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
로 들며, 모든 외국인을 포함할 때 행정 혼
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고려인마을 거주자 4800여명
(동포 비자 37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
번 소비쿠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 대
부분은 제조업·농장·건설 현장에서 일하
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입국한 고려인들
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전
국적으로 거주 중인 고려인은 약 12만명
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이웃사촌’인 상당
수의 고려인이 소비쿠폰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안타깝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연경(44)씨는
“고려인마을 주민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
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들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공평한 정책이 적용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지민(28)씨도 “입장을 바꿔 내가 소
비쿠폰을 받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사용하는 언어와 외모 등이 조금씩
은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주민
들이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만큼 고려인들도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



일 경험 드림 광주 청년 일 경험드림 행사가 14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려 구직 청년들이 희망사업장 상담과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며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거주 미취업청년 19세~39세까지 가능하다. 김양배 기자

다”고 말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동포들도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책에서는 언제나 뒤로 밀린다”며 “한
민족이라는 말이 실제 정책에서는 적용되
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엔 꼭 이

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 보도로 소비쿠폰 지원 대상
에서 고려인이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
면서 고려인마을에는 지자체, 경찰, 시민
단체 등에서 지원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실까지 전달된 상황
이다.

실제 대한고려인협회는 지난 11일 대
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민
생소비쿠폰 정책에서 재외동포 소지자들

제외한 조치는 “반복되는 차별”이라며 철
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고려인 동포들도 국민의 의무
를 다하고 있는 만큼, 소비쿠폰 지급 대상
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혜택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통합 의
지를 가능하게 하는 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4일 협회에 “심도있는 논의
후 재회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
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3면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특검,尹 강제구인 불발... “오늘 오후 2시 인치 재지휘”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
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
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
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

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
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
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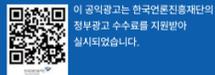
소환 불응尹 ‘버티기’에 1차 구인 무산
“전 대통령에 물리력 동원 어렵다” 판단

날인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
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
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금일 출석과 관
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
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데려와 앉도록
하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
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
면서 또다시 조사가 무산됐다. 연합뉴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1로 만난 42지만
우리에게 맡겨 235

온라인피해 365 센터



전화 상담

국번없이 142-235 (전국대표번호, 수신자부담)

(09:00~12:00 / 13: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키키오톡 상담

키키오톡 상담 검색(돋보기) 클릭

-> 온라인피해365센터 검색

-> 채널 추가 및 상담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상담

누리집(www.helpos.kr)에서

‘온라인상담신청 바로가기’ 누르고

온라인 상담 신청



우편 상담

온라인피해상담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주 소: (062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5

수유빌딩 2층

* 피해상담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위임장 첨부) 신청 가능